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윤종복 의원입니다.

○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 존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세계유산 보호는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국제기준과 국내 법질서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미 법과 사법적 판단으로 정리된 사안을 행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의 이름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면, 이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종묘 인접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보호구역 외 지역까지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사실상의 사전 인허가 요건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본래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리 도구이지, 모든 개발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또한 선정릉,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세계유산 보호 기준이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 더 나아가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 주도의 입법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주민 숙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 대상지 지정과 인허가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도시계획 권한의 본질적 영역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숙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이에 본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첫째,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호 기준을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호구역 외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 둘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를 보호구역 외 개발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인허가 요건으로 확대

적용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 셋째, 국토교통부가 보존과 개발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에 대해 명확한 정책 판단과 책임 있는 입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주민 숙의를 배제하는 직권 지정·인허가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 넷째, 국무총리실이 세계유산 보호, 주택 공급, 도시정비 정책 간 기준 충돌과 부처 간 불일치를 방치하지 말고,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기준 통합을 통해 국정 운영의 최종 조정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호는 멈춤의 명분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금지의 기술이 아니라 공존을 설계하는 민주적 결정입니다. 세계유산 보호와 도시의 미래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법과 절차 위에서 조화롭게 설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 본 결의안은 법치행정과 지방자치라는 우리 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그 혼선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책임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